진현환 1차관, “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·피해회복 위한 대책 지속”

- 7일 「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」 찾아 지원현황 점검·적극 지원 당부 -

-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월 7일(수) 오후 3시 대전광역시 유득원 행정부시장,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전 문지동에 위치한 전세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(이하 지원센터)를 방문하였다.
 - 지원센터를 찾은 진 차관은 대전 전세피해 상황과 지원현황을 점검하고, 일선에서 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.
- 이 자리에서 진 차관은 “정부는 피해 임차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”면서,
 - “특히, 지난 1월 매입임대 요건 완화, 전세임대 신설 등 다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데, 다른 시·도에 비해 다가구의 비율이 높은 대전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말했다.
- 진 차관은 함께 참석한 대전시 관계자들에게 “전세사기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, 법률 및 심리상담과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밝은 지자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”고 강조하였다.
 - 아울러,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내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, 경·공매 서비스 지원 확대 등이 2월 1일부터 시행되어 초기 단계이므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촘촘한 서비스 제공을 당부하였다.
- 이어서 진 차관은 “정부는 피해자 지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가구주택은 물론 관련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,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2024. 2. 7.

국토교통부 대변인